

# “전북 뭉 찾을 수 있도록 정책 수립할 것”

▶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전북 방문

### 새만금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농생명·탄소 메카 조성 등 지역발전 3대 비전 제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경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만금개발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12일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새만금 내부 개발이 신속히 이뤄져 전북의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전북발전의 3대 비전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점을 완료해 전북을 연금과 농생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과 새만금에 투자를 집중해 차기 정부에서는 매립을 완료하고 실제로 가동이 이뤄져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와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성장시켜나간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어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의 지지부진을 비판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하며 특히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중인 세계잡거리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에 기필코 유치해 새만금을 관광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전북 차별론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가 전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호남이라는 묶음으로 연관하지 않고 전북 뭉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계에 떠돌고 있는 빅텐트론에 대해서

는 강하게 비판을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빅텐트론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연대 수단”이라며 “지지를 1위가 문재인이 대세라기 보다는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지지를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주장이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가 현 정부에서 홀속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하면서 “공론화해야 하며 주변국들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재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의 시기는 내년 지방

선거와 함께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성격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한 방법”이라면서 “개헌으로 책임 총리제 도입과 삼권분립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지사 및 문동신 군산시장과 티타임을 가지며 군산조선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송 지사와 문 시장은 군산조선소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

에서 국가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의해 군산조선소 존치는 현대중공업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오후 3시에는 전주와 산체육관에서 열리는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새로운 전북포럼’에는 전국 조직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나비포럼,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전북포럼, 민주당 여성당원들이 주축이 된 여민포럼, 노동자 연대모임, 최재성 전 의원이 주축인 넥스트 코리아가 참여한다.

이 포럼의 상임대표는 안도현 시인과 이상직 전 의원이 맡았다. /인재용 기자

## 특검, 이재용 오늘 재소환

###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번주 중 결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3주간 조사하는 동안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가 조사한 이후, 이번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 김춘진 민주 도당위원장, 정부 방역구조 개선 촉구

반복되는 구제역과 AI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도당위원장이 정부 방역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AI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던 정부가 이번엔 구제역 발병과 확산으로 국민의 발상, 식탁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활 대행은 모든 전지 행정을 멈추고 당장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책임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국민을 불행케 하는 국정운영을 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12월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백신 놓는 날을 정해서 전 농가에 집중하고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방역은 농식품부 축산국이 하고 있지만 검역 본부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구조”라며 “생산을 장려하는 농식품부 축산국과 방역을 책임지는 검역 본부를 서로 분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정동영 의원 “아파트값 거품 제거해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 병)이 지역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로소득을 키우는 아파트값 거품 제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정동영 의원실 자료를 분석해 “박근혜 정부 4년, 아파트값 700조원 상승, 이중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강남3구의 아파트는 한 채당 3억원이 상승한 반면, 전북은 한 채당 60만원이 상승했다. 이는 강남의 상승 금액이 전북에 비해 50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비교에서도 전북은 충남의 상승률에 14배, 서울과는 120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박근혜 정부 이후 부동산 값이 1,600조 상승했음을 발표했다”며, “아파트값 등 집값 상승이 지역별 자산격차 심화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경실련 발표에 대해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서라도 아파트값 거품 제거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6년 정부가 11.3 대책으로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강남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를 내세우는 정부 주장은 엉터리”라며, 뺨을 맞았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일 일부 언론의 ‘강남서초 보급자리주택은 로또’라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로또’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라는 상식에서 주거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 김승수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탄력’

### 문재인 전 대표, “적어도 30% 채용하는 할당제가 돼야”... 대선공약화 가능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로써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도시가 당초 취지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인재들을 좀 더 많

이 채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어도 30%정도는 채용하는 할당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앞장서온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가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및 문 전 대표의 대선공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힘이 실리게 됐다.

문 전 대표는 또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다른 공공기관들도 함께 그 방향으로 노력해야하고,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이전된 공공기관은 적어도 의무적으로 그 지역인재를 30%이상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혁신도시에 건물과 사람이 내려왔지만, 원래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움직일 때 최소한의 치안이라든지 문화센터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지자체가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게 마련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면서 “참여정부 때 추진됐던 이 혁신도시가 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삶도 살려주시기를 진심으

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혁신도시에는 직원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함께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주도시로 가꾸어져야 된다”면서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이런 또 교통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정주기반이 갖춰줘야 가족들이 다 함께 내려올 수 있다. 그런 정주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시장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고, 단계적으로는 50%이상 채용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인재용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 계 욱